

경제적 노후 준비 실태 및 정책과제

*Old Age Preparedness of Korean Baby
Boomers: Policy Implications*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노후 경제적 부양 책임에 대한 인식은 점차 본인, 그리고 연금 등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 중장년층을 이루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에서는 부모 세대에 대한 경제적 부양 책임을 갖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본인세대에서는 본인 스스로 노후 부양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이들의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적 노후준비의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 노후준비의 수준은 100점 만점에 47점에 그치고 있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에서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직간접적 지원정책을 통해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과 고령층의 고용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들 정책을 통한 경제적 노후준비가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개선하고자 노후소득보장체계와 노동시장과의 연계, 고용기관의 직원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 국민의 장기저축 촉진을 위한 지원 등이 필요로 할 것이다.

1. 서론

1955년부터 1963년은 한국전쟁이후 급격한 출산율 향상으로 인해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타났으며, 이들 거대 인구 집단은 2020년부터 노인(65세 이상)세대로의 진입을 시작하여 2028년 진입을 완료할 것이다. 또한 이들 베이비부머 세대는 우리사회의 일반적 퇴직연령이라고 하는 55세를 넘어서면서 서서히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노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 경제상태, 여가, 사회참여, 건강, 가족관계, 종교 등의 요인들이 꼽히고 있으며, 이들 중 노

후 경제 소득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현 노인 세대의 경제적 수입원의 상당부분은 자녀들로부터 이전 되고 있으며, 또한 현 노인세대의 자녀세대인 베이비부머 세대에서도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부담의 책임은 51.7%가 자녀와 가족에게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베이비부머 본인들의 노후 경제적 책임은 본인과 배우자가 54.6%로 높으며, 그 다음이 연금·사회보험 그리고 국가의 비중이 38.0%이며, 자녀와 가족의 비중은 3.3%이다¹⁾.

즉, 점차 노년기의 경제적 책임은 자녀세대가 아닌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인

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15년 이내에 노인 세대가 될 베이비부머 세대로 대표되는 중장년층의 경제적 노후준비는 어느 수준인가? 본 글에서는 향후 베이비부머로 대표되는 미래 노인 세대의 노후준비 실태 및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 현황 상태를 살펴보고, 이들의 경제적 노후준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중장년층의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

보건복지부(2012)에서 개발된 노후준비 진단 지표에서 재무영역의 노후준비 지표는 준비여건, 행태인식, 자산 현황의 3개 영역의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진다. 준비여건으로는 본인과 배우자의 예상 은퇴연령과 소득활동의 안정성이며, 재무영역 노후준비의 행태와 인식으로는 제2의 일에 대한 준비, 장기저축 및 투자액 비율, 노후 필요 생활비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어진다. 노후준비의 재무영역에서 은퇴연령, 소득활동의 안정성, 제2의 일에 대한 준비는 노후에 계속적 노동시장의 참여를 통해 수입원의 안정성을 보장받는 것이 노후에 재무준비의 하나의 요인임을 나타낸다. 또한 노후에 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금융자산, 부동산의 다양한 자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 구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지향하고 있는 ‘다층소득보장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표 1. 경제적 노후준비 지표 구성

영역	문항
준비여건	1. 본인의 예상 은퇴연령
	2. 배우자의 예상 은퇴연령
	3. 본인의 향후 소득활동의 안정성
	4. 배우자의 소득활동의 안정성
행태인식	5. 제2의 일에 대한 준비
	6. 장기 저축 및 투자액 비율
	7. 노후 필요 생활비에 대한 인식
자산현황	8. 공적연금(국민연금)
	9. 퇴직(연)금
	10. 개인연금
	11. 연금을 제외한 금융자산
	12. 부동산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년 노후준비지표 소개 및 해설.

보건복지부(2012)의 노후준비 지표에 따른 현 중장년층(35~64세)에 대한 재무준비상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노후준비 재무영역의 총 점수는 100점 만점에 47점 수준으로 나타났다¹⁾. 이는 대인관계가 평균 60.5점이고, 건강영역이 75.0점, 여가영역이 46.1점과 비교할 때, 여가영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대인관계나 건강영역의 노후준비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무영역 노후준비 정도는 성, 연령, 학력 및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성별로는 남성이 100점 만점에 49.8점이며 여성이 44.4점으로

1) 정경희 외(2011). 베이비부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국회 보건환경포럼 · 보건복지부(2013). 노후설계서비스 민관협약식 및 노후설계지원법 제정 공청회 자료집.

나타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소득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며, 이는 노후의 경제적 수준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노인에서도 나타나는 여성 노인의 빈곤 현상이 향후 미래 세대 노인에게도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을 나타낸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는 49.8점과 47.9점으로 30대와 60대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60대의 경우 100점 만점에 37.2점으로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들 세대에서는 이미 은퇴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준비여건이 낮게 나타나며, 더 나아가 공적연금, 개인연금 제도화의 혜택을 받지 못한 세대로서 자산현황에서 연금영역의 준비점수가 낮은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비해 30대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등의 비율은 높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40대와 50대에 비해 낮아 그들에 비해서는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에서 46.8점으로 40~50대와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의 차이는 크지 않다. 즉, 30대가 노후를 맞이할 때 쯤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는 현 노년세대에 비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 이상은 52.3점, 고졸은 46.3점, 중졸 이하는 39.2점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안정적 직업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예측되어진

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이 41.3점인 것에 비해 기혼은 48.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미취업의 경우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연금제도 또는 퇴직금 제도 등이 비교적 안정적인 화이트칼라에서는 56.4점으로 높은 준비상태를 나타냈다. 그러나 농·임·어업과 블루칼라의 경우 경제적 노후준비 상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 응답자 특성별 경제적 노후준비(재무영역) 수준

(단위: 점수, 명)

구분		평균	사례수
성별	남성	49.8	1,546
	여성	44.4	1,524
연령	35~39	46.8	551
	40~49	49.8	1,174
	50~59	47.9	952
	60~64	37.2	392
학력	중졸 이하	39.2	506
	고졸	46.3	1,505
	대학재학 이상	52.3	1,016
혼인 상태	미혼	41.3	168
	기혼	48.8	2,676
	이혼·사별·별거	31.0	227
직업	미취업	30.0	720
	농·임·어업	49.1	140
	화이트칼라	56.4	822
	판매서비스	51.8	612
	블루칼라	48.9	776

자료: 국회 보건환경포럼·보건복지부(2013), 노후설계서비스 민관협약식 및 노후설계지원법 제정 공청회 자료집.

재무영역 노후준비 지표를 통한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의 평가는 재무영역의 경우 60.7점 이

상은 노후준비 수준에 있어 높은(상)의 수준이며, 33.5점 이상~60.6점 이하는 보통(중)의 수준이며, 33.4점 이하는 낮은(하)의 수준으로 구분되어진다. 재무 노후준비 수준의 결과에서 상은 20.7%, 중은 62.2%, 하는 19.4%로 나타나며, 이는 총 노후준비 수준이 상이 27.3%, 중이 61.6%, 하는 11.1%의 분포를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노후준비 수준에서 특히 재무영역의 준비 정도가 낮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이는 앞서 살펴본 노후준비 점수에서도 나타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경제적 노후준비의 수준별 분포

(단위: %)

노후준비수준	재무노후준비	총 노후준비수준
상	20.7	27.3
중	62.2	61.6
하	19.4	11.1

자료: 국회 보건환경포럼·보건복지부(2013). 노후설계서비스 민관협약식 및 노후설계지원법 제정 공청회 자료집.

3. 경제적 노후 준비 지원 정책

국민의 안정적 노후준비는 국민 개인의 행복한 노후생활 달성이라는 목적 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노인세대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인 퇴직을 앞두고 수립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베이비부머세대로 대표되는 미래 노인세대에 대한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의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중 경제적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정

책으로는 3가지 접근이 이루어졌다.

첫째, 노후설계지원제도이다. 이는 경제적 노후준비 영역에 국한된 지원정책은 아니지만, 노후 생활의 안녕을 위해 미래에 대한 설계를 지원하고, 이중 경제적 준비에 대한 부분이 큰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경제적 노후준비는 노후준비의 타 영역에 비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준비되어야 할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노후설계지원제도에서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설계는 노후 뿐 아니라 전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과 소비, 저축 등의 재무설계의 기능을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재무영역의 노후준비 지표에서 행태인식의 '노후 필요 생활비에 대한 인식'은 노후설계지원서비스를 통해 인식개선 효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둘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지원정책은 노후 소득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의 운영과 이들 연금제도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책은 국민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 지원정책, 개인연금 가입 촉진을 위한 소득공제 정책은 노후의 다양한 소득원 확보를 통한 안정적 경제 준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또한 주택, 토지 등의 자산을 활용한 노후 소득원 확보를 촉진하기 위한 주택연금 제도 운영은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국민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셋째, 경제적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장년기 이후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제도가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60세 이전 퇴직이 일반화되어 있음으로 인해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다양한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과 이들 연금 수급 연령간의 차이로 인해 경제적 생활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고령자의 경제활동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고령자(55세 이상)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고령자 의무고용율,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다. 더 나아가 적극적인 고용촉진을 위한 전직 지원 장려금 제도,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시 장려금 지원 등의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적연금제도 가입 의무를 제외하고는 퇴직연금과 고령자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은 대부분 기업을 비롯한 고용기관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정책이 실시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나타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4. 경제적 노후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국민 모두는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노후준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음에 불안해 하는 것이 현실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로 대표되는 미래 노인세대는 ‘깁 세대’, ‘샌드위치 세대’라고 불리는 것처럼 부모세대의 부양과 자녀세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갖고 있어 정작 본인들의 노후준비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중장년층의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현재 1963년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모두 노인으로 진입하는 2028년에도 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은 미흡할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따라서 향후 정책적으로 국민의 경제적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서는 소득보장과 고령층의 고용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표 4. 국가의 경제적 노후준비 지원 정책¹⁾

구분	내용	의무여부(의무/권고)
노후설계지원	노후설계지원제도	(제도 준비중)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지원정책	공적연금제도	의무
	퇴직연금 가입 지원	권고
	개인연금 소득공제	-
	주택연금	-
노년기 이전 경제활동 지원	고령자의무고용율	권고
	연령차별금지법	-
	전직지원장려금제도	권고(2차기본계획)
	대기업퇴직전문인력활용 (대기업퇴직전문인력중소기업채용시활동장려금지원)	권고(2차기본계획)

주: 1) '대한민국정부(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자료를 재정리함.

우선 연금 개시시기와 퇴직시기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노년기 진입이전에 경제적 어려움이 노년기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어질 것이다. 또한 고용기관의 직원들의 노후준비 지원 촉진을 위한 고용기관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로 할 것이다. 그 예로는 고용기관에서 정년연장, 재고용, 고령자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거나, 적극적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설계서비스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차원에서 국민의 경제적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서 장기저축, 연금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등에 대한 모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